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시안¹⁾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

고득영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기획총괄팀장

1.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의 대응

■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2005년도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의 절반에 불과한 1.08명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세계 최저수준임.
- '80년 87만명이던 출생아 수도 44만명으로 감소하였고 주 출산연령층 여성 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도 출생아 수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급격한 출산을 하락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맞물려 고령화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켜 우리 사회의 지속발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바, 그만큼 우리 사회 · 경제가 미래의 변화에 대한 적응기반을 갖추는 데 주어진 시간도 매우 짧은 실정임.
-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출산을 하락이 급격하지 않고 고령화 속도가 완만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고령사회에 적응하고 있음.
- 정부는 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05년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와 범정부적 정책추진기구로서 12개 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출범시킨 바 있음.

¹⁾ 이 내용은 정부가 2006년 6월 발표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중에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임. 전문은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www.precup.go.kr에 실려 있음.

- 이는 정부가 인구의 양적성장억제정책('61~'95)과 저출산 수준 유지 기조 하에 추진한 인구자질향상정책('96~'03)에서 공식적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임.
- 이러한 정책 방향 전환은 일본 등 외국에 비해 대응이 늦기는 하였으나 장기적인 전망 하에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을 마련하고, 6월초 그 시안을 발표함

- 이 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방향과 각 부처가 추진할 내용을 담고 있음. 핵심 내용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의 3대 분야의 대책을 포괄하고 있음.
-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위기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 전반을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승화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정부는 2020년까지 OECD 평균수준의 출산율 회복을 목표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지만, 베이비붐 세대('55~'63)가 은퇴하고 초저출산 세대('01년 이후 출생자)가 가임기에 진입하게 되는 2020년경에는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대응도 그만큼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정부는 2020년 이전에 출산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이자 우리나라의 IMF 위기 이전 수준인 1.6 정도로 회복하고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함.
- 출산율 회복은 출산 억제에 비해 정책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그러나 2020년까지 출산·양육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함께, 범국민적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출산율 반등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나아가 OECD 국가 수준을 넘어 궁극

적으로는 국민들이 희망하는 만큼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적 전망하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며, 금번에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도 향후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임.

2. 저출산의 원인과 정책추진방향

가. 저출산의 주요원인

■ 한국사회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가치관의 변화 등에 기인함

- 저출산의 인구학적 요인은 결혼연령 상승과 기혼부부의 출산자녀수 감소(유배우출산율 감소)로 규정되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임.
- 최근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혼·미혼에 상관없이 출산연령대의 국민들이 희망하는 자녀수는 2명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²⁾ 그러나 실제 출산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희망자녀수와 실제 출산율간의 괴리는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정부는 그 중요한 요인이 젊은층의 소득·고용의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과 자녀양육 부담 증가에 있다고 보고 있음. 특히, 주 출산연령대인 25~34세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은 결혼·출산의 연기 또는 포기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최근 25~29세 여성 고용율이 크게 증가('00년 53.7% → '05년 63.0%)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가족·기업·사회의 인식과 고용환경이 미흡하고 육아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 중단에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 이러한 사회경제적 원인과 함께 결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노후 경제적 지원과 가계계승 등의 전통적 자녀관의 변화도 출산을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나. 정책의 기본방향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이와 같은 저출산의 원인, 즉 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둠

- 출산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가운데,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희망하는 자녀 수 만큼을 출산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기반을 갖추어 준다는 것이 기본 취지임.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3대 목표를 수립·추진해 나가고자 함.

첫째,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 영유아기 육아문제와 학령기 아동의 교육, 산모의 임신·출산과 신생아기부터의 건강관리 등에 이르기 까지 개인과 가족에게 집중되어있던 출산과 양육의 직·간접적 부담을 사회가 분담해 나갈 것임.

둘째,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던 양육의 책임을 양성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가족·사회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기업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임.

셋째,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임. 새롭게 아이를 낳도록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임.

※ 정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개인적으로는 원하는 만큼 아이를 낳아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사회적으로는 출산을 회복의 기반을 조성하여 고령화의 도전에 대응할 태세를 갖추어 나가고자 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3.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되는 환경들을 제거해 나간다는 기본원칙 하에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영유아기 자녀양육을 집중 지원하고 학령기 아동의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

-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해 온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국민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임. 이를 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5년간 총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로써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80%가 정부지원을 받게 됨.
- 또한,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방과후 학교를 대폭 확대하여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둔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임. 특히,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2010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것임.

■ 다자녀 가구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반적인 사회구조를 자녀양육가정에 유리하게 재편해 나가고자 함

- 다자녀 가구에는 조세와 사회보험 혜택 확대, 주택분양 우선권, 육아지원시설 이용 우선순위 상향조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과 입양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임

- 18세미만의 모든 입양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수속시 입양가정에서 부담했던 수수료(1인당 200만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
-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이 등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할 계획임.

※ 이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

■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일과 자녀 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임

- 이를 위해 국공립 육아지원시설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충하고,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와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확대하여 부모의 여건에 따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임.

■ 불임부부 및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불임부부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것임.
- 임신부의 산전관리 지원, 신생아 출생등록 전산망 구축, 신생아 장애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확대와 난청검사 등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임.

나.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직장과 사회의 문화를 양성평등적, 가족친화적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역점을 둘 계획임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 가능성이 결혼·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음.

※ 특히,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양육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커져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한 경우 쉽게 출산을 중단 또는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집중 육아기 동안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 등을 통해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휴직 요건을 완화(현재 만 1세미만 자녀양육자 → '08.1.출생아부터 3세미만)하고, 휴직급여도 인상하는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시간제 육아휴직)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선택범위를 넓혀 나갈 것임.

- 중소기업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을 추진함.

-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여성재취업장려금' 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한 '출산후계속 고용지원금'도 새롭게 지원할 예정임.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기업경영모델을 개발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직장의 분위기와 문화를 개선하는 동시에, 학교와 사회 교육을 통해 인구·가족·양성평등 가치관을 확립해 나아갈 것임.

다.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아동학대 · 방임과 학교 폭력 등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임.
-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등을 확충 · 내실화하여 저소득층 및 결손 아동 · 청소년의 보호에도 노력할 것임.
- 아동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 발달을 위해 가족 · 학교 · 지역사회 ·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